

이면계약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 적발

서울시, 1억9000여만원 받아내 하도급사에 지급

서울시는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일부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 1억9000여만원의 돈을 받아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1년여 넘도록 지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까지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례”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총공사비 28억 원짜리 도로공사와 관련, 원청업체인 A건설이 하청업체인 B개발에 도급액의 85.3%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와는 달리 도급액의 80%만을 지급한 불법 이면계약을 적발했다.

이후 시는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A건설에 수차례 촉구하는 한편, 지난 2월, 3개월간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A건설과 보증사는 계약성립(이면계약)을 이유로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이에 시는 지난 4월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소송 제기 압박을 느낀 A건설과 보증사는 대응을 포기했고, 시는 하도급업체에 반환받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A건설에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송득법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